

반도체 이익 '국민 배당' 띄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12일 삼성전자 노사(勞使)가 성과급과 관련해 이틀째 사후 조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 전체와 공유하는 '국민 배당금' 제도를 들고 나왔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AI와 반도체 산업의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국민 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삼성전자는 AI 인프라 투자 경쟁으로 300조원 넘

"AI 시대 과실, 특정 기업의 것 아니야... 초과 이윤 환원해야" 발언 뒤 코스피 급락... 삼성전자 노사, 2차 협상서도 입장차

는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성과급을 놓고 노사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회사의 초과 이익을 기업·근로자만이 아니라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청년 창업 자산, 놓여온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등을 예시로 들며, "아무 원칙 없이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

다. (우리나라) AI 초과 이익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날 김 실장의 발언은 한국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과제 신호로 해석되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8000 포인트를 넘보다가, 그의 발언으로 5% 넘게 급락했고 차츰 회복해 전날 대비 2.3% 하락 마감했다. 김 실장은 본지에

"기존 세율을 높이는 등 증세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초과 세수만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실장 발언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즉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송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스피는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 실장이 느닷없이 국민배당금 구상을 꺼내 든 후 폭락했다"며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민·주희연 기자 A3면에 계속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집' 정부는 '일단 팔아라' 압박

실거주 의무 유예해 매물 유동성 문제 언급 안해 혼란 예상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가 전·월세를 놓고 있는 집을 팔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먼저 열려왔던 매도 회로를 1주택자에게 넓혀 매물 잠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게 어떤 규제가 적용될지,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결정하지 않고 '일단 팔아라'고 압박하는 모양새여서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토허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해 세입자가 있는 집은 사실상 매수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최장 2028년 5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마친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시 조

치다. 기존 유주택자가 이번 조치를 갈아타기에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해 매수 자격은 정책 발표일부터 잔금 지급 시점까지 무주택인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문제는 정책 순서가 거꾸로라는 점이다.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최대 82.5%'라는 명확한 페널티가 존재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매도에 따른 손익을 계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보유세 인상 등이 거론될 뿐 도입 여부와 시기, 강도 등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직장·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는 인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된 바 없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특공제나 보유세가 어떻게 될지 명확한 정보도 없이 토지거래허가 유예부터 해주고 팔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다주택자 유예 때보다 매물 출회 효과도 적고 시장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이정구 기자 A2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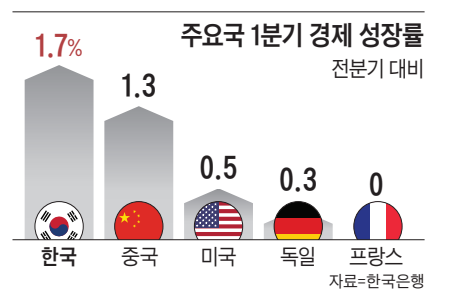


美, 극비 '핵잠 위치' 공개하며 이란에 경고

지난 10일 미 해군 오하이오급 전략핵잠함 'USS 알렉스카'가 스페인 남부 해안의 영국령 지브롤터에 당도한 모습. 이란이 제시한 수정 종전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쓰레기'라고 맹비난한 가운데 미 해군 제6함대는 11일 핵잠함의 지브롤터 도착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통상 극비로 취급되는 핵잠함의 동선을 공개한 것을 두고, 유사시 이란을 기습 타격할 수 있다는 미국의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사 A4면

1분기 성장률, 중국 제치고 주요국 1위

AI 반도체 초호황에 수출 늘어 1.7%로 5년6개월 만에 최고치



1분기(1~3월) '1.7% 깜짝 성장'을 한 한국이 을 들어 주요국 가운데 성장률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AI(인공지능) 투자로 인한 반도체 초호황의 주요 수혜국으로 떠오른 영향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인 1.7%는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2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각각 1.4%, 1.3% 성장했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은 0.5%, 독일은 0.3% 성장했고, 멕시코(-0.8%), 아일랜드(-2%) 등은 역성장했다.

한은의 주요국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대만 통계청 등에 따르면 대만은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2.8% 성장하며 39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수출 비율이 70%에 가까운 대만도 한국처럼 AI 반도체 특수의 영향을 받았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에 건설 경

기 부진 등으로 성장률이 -0.2%까지 떨어지며 주요 41국 중 38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올 1분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5.1% 급증했고, 반도체 공장 건설 등으로 건설 투자(2.8%), 설비 투자(4.8%)도 개선되며 5년 6개월 만의 최고 성장을 기록했다.

국내의 기관은 올해 성장 전망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전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8%로 높였다. 최근 주요 IB(투자은행) 8곳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4%로 집계됐다. 정부는 다만 2분기에는 1분기 급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와 중동 전쟁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정민 기자

八面鋒

靑 정책실장 "반도체 수익, 국민 배당금"에 외국인 매도하고 증시 출렁.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뭉개어졌다.

대법원,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 첫 확정 판결. 이제 지나간 계엄보다 다 진행 중인 위헌·위법이 더 문제.

美서부 부총 市長, 중국 스카이 힘의 기소돼. 中의 무차별 정보수집·여론전,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문제 아니.

대검, 박상용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청구

자백 요구·음식물 제공 등 이유 '언어 술파티' 의혹은 포함 안 돼

더불어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언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상용(사진)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12일 법무부장관에게 청구했다. 대검 감찰위원회가 박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라고 권

고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2023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언어와 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날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한 뒤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점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언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박 검사의)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은 감찰위 의견을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나영·유희곤 기자 A10면에 계속

음란성 동성애퀴어축제 6월 13일(토) 서울 도심 중앙에서 열리는 것 절대 반대한다! 우리 자녀들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검찰은 2015년 동성애축제 음란성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했다.

2022년에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신체 과도노출, 음란물 판매, 전시하지 말 것'이란 조건을 어기면 다음 해부터 서울광장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퀴어복권', '퀴어부적' 등 물품을 판매했다. (조선일보 22.07.16)

- 동성애퀴어축제 반대
- 성 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반대
- 차별금지법 반대
- 낙태 및 맞물 낙태 전면 허용 반대
- 종교의 자유 침해(민부개정법률안) 반대

동성애퀴어축제

서울광장에서 2015년 개최했던 동성애축제에서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후에도 축제 참가자들의 과도한 노출, 성인용품 전시 및 판매 등으로 인해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동성애퀴어축제가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열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퀴어축제 가족과 함께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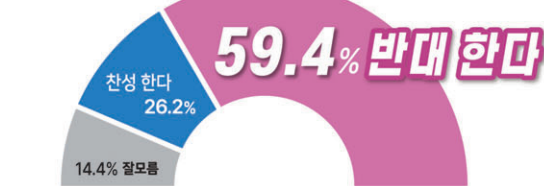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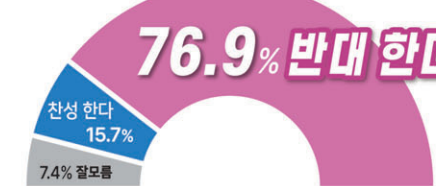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동성애퀴어축제가 열린다면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으십니까?

성전환 수술없이 성별 변경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타고난 성별과 다르게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법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애나 성전환, 그리고 남성 여성 이외에도 개인이 임의로 선택한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동의하지 않거나 비판 혹은 반대할 경우, 차별로 간주하여 3천 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이 가능하며, 불이익 조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국민대회 시청영 2,3번 출구
6월 13일(토) 오후 1시 서울시의회~승례문
주최 |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